

국민 혈세 연간 200억 원 받고도 아이들 푼돈 터는 국립광주과학관

매년 국민 혈세 수백억원을 받아 운영 중인 국립광주과학관이 어린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요금을 책정 하는 등 '돈 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장료와 관람료에 주차료는 기본이고,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과학관 내 매점과 커피숍에선 시중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받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놀이공원 수준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과학인재 양성을 내걸고 운영중인 교육 프로그램 대부분도 유료인데, 최대 30만원이 넘는 교육료까지 받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비싼 이용료 때문에 과학관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불만까지 나오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과학교육의 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기준 국립광주과학관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초등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2000원이다. 주차요금은 1일 기준 2000원이다.

과학관은 또 특수영상관인 ▲스페이스 360 ▲천체투영관 ▲4D 영상관 ▲시뮬레이터 ▲3D 영상관 등 5개를 운영중인데, 3D 영상관만 무료이고 나머지 4개의 영상관은 1500~3000원의 입장권을 구매해야만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과학을 품은 스포츠, 스포츠는 즐거워' 특별전은 관람료만 7000원에 이른다.

놀이공원 수준의 비싼 매점에 교육프로그램은 30만원 달해 입장료·관람료에 주차료까지 "과학관 갈 엄두 안나" 시민 불만 과학관측 "기재부 수익 요구 때문"

초등학생 아들(2학년)과 함께 과학관을 찾은 김소민(여·37·광주시 남구)씨는 "입장권만 있으면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 어가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예외적이지 않 은 거는 푼돈"이라고 불만을 털어냈다.

여기에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과학영재교실 역시 고가의 참가비 때문에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과학관 내 별빛누리관과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박 2일 교육프로그램은 4인 가족 기준 참가비만 19만원이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영재 융합탐구교실 등은 10주(30시간) 교육과정에 3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있다. 일주일에 3시간씩 이뤄지는 이 수업은 물리학·화학·생명공학·전자공학·로봇공학 박사가 강사로 선다.

과도하게 책정된 교육비도 문제지만, 이용객들이 유일하게 간식 등을 사먹을 수 있는 매점과 커피숍도 비싼 요금을 받 기는 마찬가지다.

과학관 1층 매점에서 간편식인 즉석떡

밥 3800원·구슬아이스크림 2500원·컵라면 1700원·이온음료 500ml 2000원 등에 판매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최저가 기준 즉석떡밥은 1300원, 구슬아이스크림 1500원, 컵라면 540원, 이온음료 900원 등이다.

또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피숍의 평균 음료 가격도 3500원 선으로 일반 프랜차이즈 판매가격 못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이 과학관을 하루 방문했다고 가정할 경우 입장료 1만원·특수영상관 관람료 2만 4000원·특별전 관람료 2만 8000원·간식 및 커피 값 3만 원, 주차료 2000원 등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일부 이용객들은 "국립이라는 이름만 내 걸었을 뿐, 이용요금을 보면 사실상 사립 시설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돈 없는 국민은 자식 과학교육도 못 시키는 세상이 됐다. 정부에선 저출산 대책을 얘기하는 데, 최소한 국립 기관만이라도 아이들이 집안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광주과학관측은 이러한 폭리 구조에 대해 "자체수익을 매년 15억 7000만원 정도 달성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요구사항 때문"이라며 "목표로 설정된 자체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폐널티를 받아 다음해 국비지원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치원 통학 버스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소방 소속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하마터면...유치원 통학버스 주행 중 화재

신속 대피...인명피해 없어

2명의 원생을 태우고 주행중이던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2일 오전 8시 25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대주파크빌 1차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22인승 유치원 통학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차량에는 운전원 A(63)씨와 인솔교사 B(여·27)씨, 어린이 2명(5세, 7세) 등 4명이 타고 있었으나, 불이 번지기 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버스는 운행 중 차량 앞부분에서 흰색 연기가 났고, 도로 한쪽으로 주차한 직후 불길이 치솟으면서 차량이 전소됐다. 경찰조사결과 운전원 A씨는 어린이를

태우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본넷에서 연기가 나고 창문 틈을 통해 타는 냄새가 나자 차량을 세웠다. 인솔교사 B씨는 탑승 중인 어린이 2명을 신속히 차량 밖으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했다. 차량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3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버스에서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업가 납치 살해' 하수인 2명 징역 5년·12년 선고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 PJ파' 부두목의 지시를 받아 광주에서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한 하수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홍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김모(6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됐다. 홍씨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김씨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접적 원인이 없는데도 조직폭력배 부두목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연락용 휴대전화를 미리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폭행이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든 회복할 수 없고 시신 유기로 유족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살인 미수, 방화, 폭행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에게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홍씨와 김씨는 폭력조직 부두목 조모(60)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 5월 19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한 뒤 감금하고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를 뒤인 같은 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주범으로 지목된 조씨의 행방은 사건 발생 6개월이 넘도록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5·18 당시 학생수습위원장 39년 만에 무죄

광주고법 재심서 선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무신)는 소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길(61)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980~1981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0년 5월 학생수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옛 전남도청을 점거하고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며 광주사태 책임을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정부에 전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0년 5월 22일 전남대 명노근

·송기숙 교수는 전남대 학생 10여명, 조선대 학생 10여명과 함께 옛 전남도청에 들어간 뒤 전남대 농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에게 학생수습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맡은 김씨는 시민대표 등과 함께 계엄분소장을 만나 5·18이 공수부대 과잉진압 때문임을 인정하고 광주 시민이 폭도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5·18로 인해 구속된 학생을 즉각 석방하라는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당시 계엄사는 무기를 수거해 반납하는 조건을 내세워 부분적으로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 중간에 일부가 석방되자 무기 일부를 회수해 반납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1980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무원들에게도 넘는 갑질행위 장흥군의회 부의장 불구속 기소

장흥군의회 부의장이 장흥군청 공무원들에게 도를 넘는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달 29일 장흥군의회 A(62) 부의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부의장은 군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분한 장흥읍 덕제리 소재 태양광발전허가 과정을 놓고 올해 초 관련 공무원 3명을 수차례에 걸쳐 부의장실로 불러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들을 다치게 할 것이다",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공무원들을 압박한 혐의(강요미수 등의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A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사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로, '강요미수' 혐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두환, 40년전 12·12 주역들과 '삭스핀 오찬'...비난 쇄도



○~사자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12일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장면이 포착돼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전두환이 40년 전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

○~정 부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정 오후 2시간 가량 이어진 오찬에는 전씨와 그의 부인 이순자 씨,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 10명이 참석해 대표적인

고급요리인 삭스핀(상어지느러미 수프)이 포함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먹었고, 와인도 곁들였다는 것.

○~임 부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던 전두환이 이날 대화 상당 부분을 주도했다"며 "간배사를 여러 번 하고 와인잔을 계속 부딪치며 12·12 당일이란 점을 까맣게 잊은 듯 광장히 밝고 화가에애하고 축하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설명.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